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2024.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 현황	2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통보)	8
(2) 스마트 조깅트랙 운영·관리 부적정(주의·통보)	22
(3) 소장품 관리 부적정(주의)	27
(4) 인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1
(5)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36
(6)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시정·주의·통보)	47
(7) 직원주택 관리비 지원 부적정(통보)	59
(8)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주의)	62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통보)	67
※ (기타) 현지도치 사항	71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집행 등 고유목적사업과 직원 인사, 복무, 계약, 시설물 관리 등 기관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한 고유목적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고유업무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스포츠과학의 연구·보급, 스포츠산업의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밖에 직원 인사, 복무, 복리후생제도, 계약, 시설물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24. 4. 15.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0일간 실지감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등 총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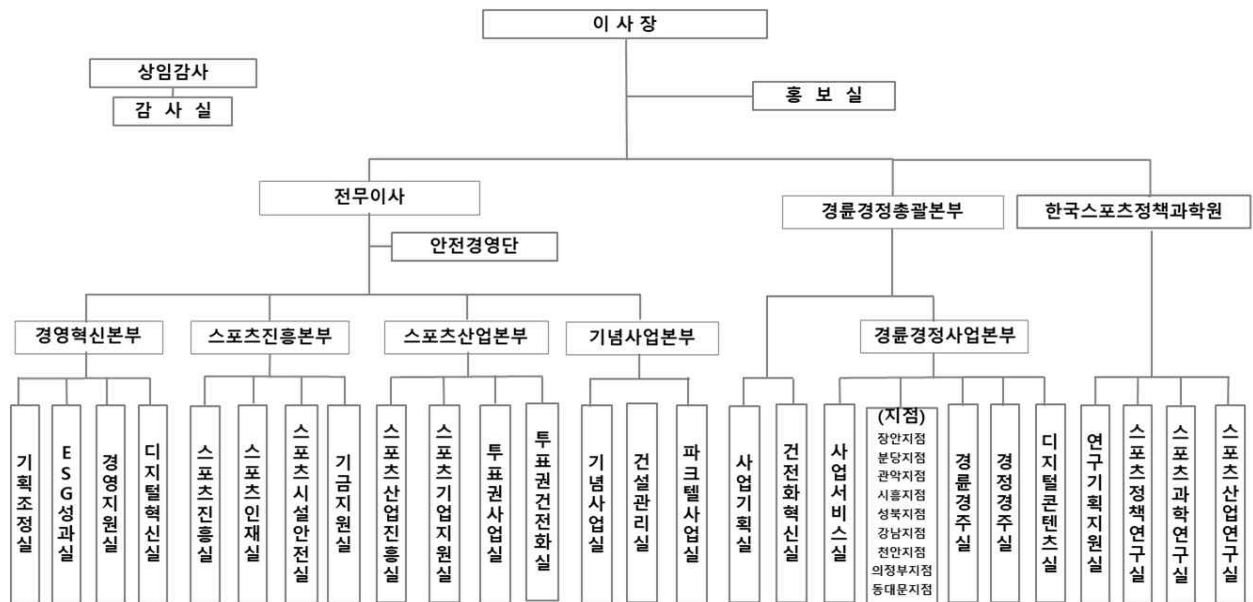
II.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 현황

1. 기관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89. 4. 20. 설립되었으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관리, 체육인 복지 증진사업,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은 2024년 4월 기준 3임원 1총괄본부 1과학원 5본부 37실 7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16명(현원 791명)이다.

□ 조직: 3임원, 1총괄본부, 1과학원, 5본부, 37실, 78팀



□ 정원: 816명(현원 791명)

2024. 4. 30. 기준, (단위: 명)

구분	현원 / 정원													
	임원/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수석 연구위원	책임 연구위원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계
인원	4/4	13/18	29/27	70/71	89/97	101/103	118/123	157/147	168/182	8/8	11/12	9/10	14/14	791/816

* 정원 외 662명(무기계약직 628명, 임금피크제 34명) 별도 운영

2. 예산 현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4년 총 예산은 기금회계 3,348,420백만 원, 법인회계 2,966,222백만 원으로 기금회계 내에서 기금사업비 1,566,218백만 원, 기금운영비 32,085백만 원, 공자금 예탁 600,000백만 원, 기금간거래 144,689백만 원, 여유자금 운용 1,005,428백만 원, 법인회계 내에서 본부 일반관리 등 135,100백만 원, 경륜 204,645백만 원, 경정 87,781백만 원, 투표권 2,404,472백만 원, 보조금 134,224백만 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2024년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금회계		법인회계	
수입	3,348,420	수입	2,966,222
□ 자체수입	2,252,915	□ 본부	135,100
○ 이자수입	27,574	○ 일반관리 등	60,550
○ 부가금	391	○ 유스호스텔	14,316
○ 사업수입(투자및연구원등)	169,377	○ 전입금	60,234
○ 법인회계 전입금	1,958,713	□ 경륜(매출 13,731억원)	204,645
- 경륜·경정 전입금	16,249	□ 경정(매출 6,755억원)	87,781
- 투표권 전입금	1,942,464	□ 투표권(매출 62,378억원)	2,404,472
○ 융자금 회수	96,860	□ 보조금	134,224
□ 정부내부수입	725,505	지출	
○ 복권기금 전입	91,954	□ 본부	135,100
○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600,000	○ 일반관리 등	121,648
○ 공자금 이자수입	33,551	○ 유스호스텔	9,027
□ 여유자금 회수	370,000	○ 차입금상환	4,425
지출		□ 경륜	204,645
□ 사업비	1,566,218	○ 사업비	185,747
○ 기금지원(직접지출 포함)	1,376,429	○ 법정배분금	12,098
○ 기금투자	31,909	○ 차입금상환	6,800
○ 기금융자(스포츠산업, 경륜·경정)	157,880	□ 경정	87,783
- 스포츠산업융자	157,880	○ 사업비	79,927
- 경륜·경정융자	-	○ 법정배분금	4,556
□ 기금운영비	32,085	○ 차입금상환	3,300
○ 기금관리비	16,633	□ 투표권	2,404,472
○ 기금사업 운영	15,452	○ 위탁사업비	387,555
□ 공자금 예탁	600,000	○ 투표권 운영경비	18,524
□ 기금간거래	144,689	○ 법정배분금	1,998,393
□ 여유자금 운용	1,005,428	□ 보조금	134,224

3. 주요 업무

- 투표권·경륜·경정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 지원을 통한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스포츠과학 연구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올림픽공원, 미사리경정공원 등) 관리·운영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11개 사안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시정 1건, 주의 6건, 통보 6건, 현지조치 2건)이 확인되어, 시정·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¹⁾

(단위: 건, 명, 원)

합계			문책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 선	권 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계 (인원)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인원)		
15	1,817,900	-	-	1 (1,817,900)	6	-	-	6	6	-	-	-	2

- 공단은 19개 공모사업을 운영하면서 심의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을 위촉(13개 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기관 차원의 전문가명부(위원 POOL) 부재, ▲사업담당부서가 심의위원 후보자와 섭외순위를 임의로 정하여 위촉(17개 사업), ▲외부위원을 50% 미만으로 구성(1개 사업), ▲동일한 심의위원을 같은 공모사업에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위촉(23명), ▲회피 사유에 대한 자체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재(9개 사업), ▲심의위원 의무(이해관계 회피, 비밀유지 등) 위반 시 자격 제한 기준 부재(19개 사업)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 올림픽공원 산책로(왕복 2.4km)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2021년 3월 구축(111백만 원)하여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설치·실행하여야 하는 모바일 앱을 2022년 7월 이후 앱 마켓에 게시하지 않는 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지비용(11백만 원) 지출
-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기념관, 국립체육박물관(26년 9월 개관 예정)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자체 지침과 다르게 소장품을 반출입하거나 직원·외부인이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소장품 내역, 출입자,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소장품 관리 부적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자체 「인사규정」과 다르게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는(총 29회 중 24회 미작성) 등 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면서 ▲검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육 관련 민간단체 임원·위원 등의 직무를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갑질근절 추진방안(2021. 1. 26.)에 따라 기관 갑질 신고 처리 현황 및 추진실태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수행(22명)하거나 검직허가 없이 민간단체 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7명),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1명)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상한 횟수(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3명)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3명)하는 등 복무 관리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다르게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817,900원 지급, ▲보증기간이 짧은 선금보증서를 제출받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기간이 가산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금 채권 보전조치 부적정(15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제출 방법을 방문 접수로 제한(205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수의 평가위원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외부위원 비율을 50% 미만으로 구성하거나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원격지 근무 직원을 위한 직원주택(기숙사)을 운영하면서 자체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다르게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료 등)를 기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여 78,853천 원 과다 집행
- 올림픽공원 등 소관 사업장 내 경비초소, 매표소, 간이매점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운영하면서 자산성 내구성 물품인 가설건축물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취득원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 올림픽공원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거나 검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미흡
- 당직근무 제도를 운영하면서 숙직자의 숙직휴무에 따른 복무 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복무 관리 미흡
- 퇴직예정직원의 경력 재설계를 위한 전직 지원교육을 운영하면서 교육 완료 후 이수증·출석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적정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목 차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고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통보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2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의·통보				스마트 조깅트랙 운영·관리 부적정		
3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의				소장품 관리 부적정		
4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의				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의·통보				검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 관리 부적정		
6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정·주의·통보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817,900원)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통보				직원주택 관리비 지원 부적정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		
9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1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지주의				숙직휴무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		
1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지주의				전직 지원교육 관리 부적정		
합계		시정 1	주의 6	통보 6	현지조치 2		(1,817,900원)	

나. 명세 : 별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1)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스포츠산업육성 등을 위한 사업이나 기업·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공모사업 지원액(2021년~2024년)^{주)}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액	45,237	55,477	60,582	49,918

주: [표 4]에 제시된 공단 공모사업(19개) 대상 연도별 집행액 합계(2024년은 예산액)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1)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2018-505호, 2018. 12. 17.) 제도개선 권고(이하 “권익위 권고”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²⁾은 심의, 평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위원회³⁾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표 2]와 같이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격요건 기준⁴⁾에 따른 검증을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명부(위원 POOL)를 구성한 후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심의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심의 대상기관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해촉(선정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에 기반한 심의제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권익위 권고 주요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심의위원 자격요건 관련	위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저해 가능성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 후보군(Pool)을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위원 구성, 심의 시 서약서 작성 의무화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사례>
심의위원 검증 관련	심의위원회에 대한 검증 절차 부재로 평가자격이 없는 위원 위촉 사례 발생 ○○○진흥원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47명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55개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학교이거나 지원과제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학교 등인데도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 ('17년 감사원)	
심의위원 위촉방식 관련	기관 재량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등 별도의 위원 위촉 절차 부재	
외부위원 구성 비율 관련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참여 여부가 위원장 재량으로 결정되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우려,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50% 이상)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	

2) 제도개선 권고 당시 1,141개 공직유관단체(공단 포함)

3) 위원회·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평가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하며,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되는 지원심의위원회 포함

4)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구체적 전문분야(예시: 문화, 예술, 체육, 경제·경영, 법, 교육, 국제협력 등)와 필요한 경력 기간 등

심의위원 반복위촉 제한 관련	<p>동일위원이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 우려</p> <p>□□□□진흥원은 3차례에 걸쳐 선정평가를 실시한 '2015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평가 시 동일 평가위원을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6명의 평가위원이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선정('16년 감사원)</p>
심의위원 회피 및 위반 시 제재 관련	<p>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선언적으로만 규정</p> <p>이해충돌 시 위원들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미흡</p> <p>- 위원들의 제척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 마련</p>

자료: 권익위 권고 자료 재구성

그리고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은 공모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심의위원 전문성의 기준이 되는 자격요건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⁵⁾,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및 전문가명부(위원 POOL) 등록·관리 절차, ▲심의위원 위촉 시 전문가명부(위원 POOL) 내 추첨을 통해 섭외 후 위촉 원칙,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 ▲심의위원 의무(이해관계 있는 경우 회피, 비밀유지 등) 및 위반 시 제재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 등⁶⁾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사례

구분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방식	해당 기관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p>■ (자격요건)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요건(관련 분야 및 경력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p> <p>* 관련분야: 문화예술(창작, 비평, 교육, 연구 등), 문화일반, 국제교류, 예술경영, 행정, 언론, 영화(연출, 시나리오 등), 콘텐츠(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출판문화산업 등</p> <p>경력기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년), 한국콘텐츠진흥원(10년), 예술경영지원센터(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0년), 영화진흥위원회(연출 2편 이상, 투자·배급 등 7년 이상, 정동극장(10년) 등</p> <p>■ (결격사유)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 설정</p> <p>*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 허위 경력, 불공정 평가,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 대표 등</p>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국립정동극장,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전문가명부 (위원 POOL) 검증·운영	<p>■ 심의위원 후보군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자천 또는 추천으로 접수하여 검증위원회의 자격요건 적격심사를 거쳐 전문가명부(위원 POOL)에 등록·관리</p> <p>· 총괄(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자격요건을 검증, 현행화하는 등 기관 공통 전문가 명단을 효율적으로 관리</p>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국립정동극장 등
심의위원	<p>■ 원칙적으로 자격요건 검증이 이루어진 전문가명부(위원 POOL) 내에서 무작위</p>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예술

5) (예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 허위 경력, 불공정 평가, 심의위원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 대표 등

6)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심의 운영내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사업 심사 운영지침」, (재)국립정동극장 「공연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위촉방식	<p>추첨을 거쳐 심의위원 후보자 배수를 추출하고 섭외 후 심의위원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무작위 추첨) 전문가명부(위원 POOL)에서 분야별 3~5배수 후보자를 무작위 추첨(섭외순위 포함)으로 추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 섭외순위에 따라 위원 위촉 * 영화진흥위원회(5배수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3배수 이상), 예술경영지원센터(4배수 내외) • (후보자 배수 무작위 추첨, 섭외순위 직접 지정)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제시한 추출기준(전문분야, 3~5배수)에 따라 후보자 배수를 무작위로 추출, 사업부서는 추출된 후보자 중에서 사업 전문성 및 이해도 고려하여 개별 섭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후보자 배수 직접 구성, 섭외순위 무작위 추첨) 사업부서가 해당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심의위원 후보자를 3배수 이상으로 직접 구성, 섭외순위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3배수 이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3배수 이상) 	<p>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p>
반복위촉 제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후광효과 우려, 동일 위원이 같은 공모사업에 3년(또는 3회) 연속 참여 제한 	<p>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국립정동극장 등</p>
심의위원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의무와 관여금지(회피제도), 위반 시 제재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심의위원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결과 책임성 부여, 공정심의 서약(회피 등 사유 발생 시 신고 후 회피, 비밀유지 및 외부누설 금지 등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 (회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자신 또는 가족이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이거나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 심의위원 자신 또는 가족이 심의대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인 경우 • 심의위원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인 경우 • 심의위원이 심의대상사업 또는 신청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공정심의 서약 등 위반 시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 기관별* 3~10년 심의위원 자격 제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제재 사안에 따라 1년, 2년, 5년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3년) 등 	<p>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국립정동극장,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p>

자료: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관련 규정 등 재구성

따라서 공단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공단의 공모사업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 2]의 권익위 권고 및 [표 3]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사례”와 같이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 포함), ▲전문가명부(위원 POOL)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절차, ▲심의위원 위촉방식(후보자 배수 구성, 섭외순위 등 무작위 추첨),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심의 후광효과를 고려한 심의위원 반복위촉 제한(3년 연속 참여 제한 등), ▲심의위원 의무(이해관계 있는 경우 회피, 비밀유지 등) 및 위반 시 제재(해촉, 일정 기간 자격 제한 등)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7)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총 19개의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단은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별 심의를 제각각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① 공모사업별 심의위원 자격요건(관련분야 및 경력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공단은 [표 4]와 같이 심의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거나(총 19개 사업 중 11개, 연번 ①~⑪)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 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스포츠산업 전문가,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자격요건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는(총 19개 사업 중 2개, 연번 ⑫~⑬) 등 총 19개의 공모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자격요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표 4] 공모사업 심의위원 자격요건 기준 여부 현황

연번	사업명	자격요건 (관련근거)	관련 내용	비고
①		없음	-	
②		없음	-	
③		없음	-	
④		없음	-	
⑤		없음	-	
⑥		없음	-	
⑦		없음	-	
⑧		없음	-	
⑨		없음	-	
⑩		없음	-	'22년 이후 주관사 공모
⑪		없음	-	'24년 신규사업
⑫		미비 (운영기준)	▲스포츠산업 전문가(스포츠 관련 교수 및 전문가) ▲경영·경제 전문가(경영·경제 관련 교수 및 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등) ▲중소기업 전문가(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⑬				
⑭		있음 (운영기준)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등	직접 및 주관사 공모 혼재
⑮				
⑯		있음 (운영기준)	▲스포츠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에서 팀장급 이상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해외인증관련 국가 또는 시험·검사인증관련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2년제 대학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주관사 공모
⑰		있음 (평가계획)	▲교수(조교수 이상), ▲선임연구원 이상(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자),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자격증미소지자의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험 10년 이상인자	
⑮		있음 (평가계획)	▲ 조교수 이상 ▲해당분야 선임연구원급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자) 연구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자 등	
⑯		있음 (평가계획)	4년제 대학 체육관련 학과(조교수 이상)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② 공단은 전문가명부(위원 POOL)를 검증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기관 차원의 전문가명부(위원 POOL)가 부재하였고⁸⁾,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위촉하면서 사업(부서)별 평가, 자문 등을 통해 알게 된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명부(위원 POOL)를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제각각 활용하고 있는 등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③ 공단은 심의, 평가 등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결격사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어⁹⁾ [표 3]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사례”와 같이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 전문성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④ 공단은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면서 [표 5]와 같이 전문가명부(위원 POOL) 등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 3배수 이상의 후보자와 섭외순위에 따라 위촉한 경우(연번 ⑮, ⑯)가 있는 반면에, 사업담당부서(또는 주관사)가 사업(부서)별 전문가명부(위원 POOL) 등을 활용하여 심의에 필요한 인원(또는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후보군을 직접 구성한 후 심의위원

8) 사업별 자격요건 검증에 대한 공단 내 공식 문건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2019년 S(R&D) 사업의 심사,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29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위원회(외부위원 6명) 검증(경력 및 전공 적합성 등)을 거쳐 261명의 전문가명부(위원 POOL)를 확정[●탐-2038(2019.12.19.)회]한 바 있으나, 2022. 1. 1.자로 S(R&D) 사업이 ▲▲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해당 전문가명부(위원 POOL)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은 확인되지 않음

9) 공단은 심의위원 결격사유 관련 일부 사항을 평가계획, 운영기준 등에 규정한 사업도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이 전반적으로 미비하여 기관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후보군 내에서 사안별 위촉하는(연번 ①~⑰) 등 대부분 공모사업이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심의위원 후보군을 직접 구성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 위촉방식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표 5] 공모사업 외부 심의위원 위촉방식^{주)}

연번	사업명	위촉방식	운영 방식
①		직접 결정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부서)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POOL 등을 활용, 자체 판단에 따라 심의위원 후보자와 섭외순위까지 직접 결정하고, 유선 접촉 후 위원 위촉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공단과 주관사(□□)가 협의하여 후보자와 섭외순위를 직접 결정하여 위촉 (위원 임기 2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
⑮			사업담당부서가 평가위원 POOL(스포츠산업, 경영·경제, 기업지원 등 총 3개 분야 30여 명 내외 위촉, 임기 1년)을 직접 구성하여 확정(내부결재)한 후에 심의 시마다 해당 POOL에서 평가위원 일정 고려하여 사안별 5~7인 섭외
⑯			
⑰			
⑱		무작위 추첨 결정	사업담당부서가 자체 전문가 POOL(973명)을 활용하여 제척사유 확인 후 1차 후보군 (170명)을 확정하고,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엑셀 매크로 기능) 방식으로 결정된 후보군(필요 인원 7명의 9배수인 63명)과 섭외순위에 따라 유선 접촉 후 심의위원(7명) 위촉
⑲			사업담당부서가 자체 전문가 POOL(341명)을 활용, 감사실 직원 입회하게 무작위 추첨(마라톤 온라인 이벤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분야별(스포츠, 행정, 경영, 교육, 국제협력) 후보군 3배수 이상 구성하고 무작위로 결정된 섭외순위에 따라 유선 접촉 후 심의위원(10명) 위촉

주: 심의위원 위촉방식은 공모사업별 가장 최근 연도에 실시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한 사항임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⑤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심의, 평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은 외부위원 구성 비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표 6]과

같이 ‘ㄱ’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9년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 구성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¹⁰⁾¹¹⁾¹²⁾

[표 6] ㄱ 공모사업 심사위원 위촉 현황(2018년~2023년)

심의연도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심의위원	인원수 (비율)	심의위원	인원수 (비율)	
2018년		3명 (60%)		2명 (40%)	5명
2019년		2명 (40%)		3명 (60%)	5명
2020년		3명 (60%)		2명 (40%)	5명
2021년		3명 (60%)		2명 (40%)	5명
2022년		3명 (60%)		2명 (40%)	5명
2023년		4명 (67%)		2명 (33%)	6명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⑥ 공단은 동일한 심의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하여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ㄴ’ 등 일부 공모사업(주관사를 통한 공모사업 포함)의 경우 [표 7] 및 [별표] “공모사업 외부 심의위원 3년 이상 연속 위촉 내역”¹³⁾과 같이 동일한 심의위원이 3년(3회) 이상 연속 위촉된 경우가 23명(3년 연속 15명, 4년 연속 5명, 5년 연속 1명, 6년 연속 2명)에 이르는 등 심의 후 광효과로 인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10) ‘ㄱ’ 사업의 경우 공단(사업 관리기관)과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협약 하에 공동명의로 공고문을 함께 게재하고 □□이 공모사업 심의를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단과 □□의 임직원이 해당 공모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내부위원으로 봄이 타당함

11) ‘ㄱ’ 사업(주관사를 통한 공모 진행)의 경우 공단이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관사(□□)에 제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2) ‘ㄱ’ 사업을 제외한 18개 공모사업의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 구성하여 운영함

13) 2018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 공모사업 심의(주관사 통한 공모사업 심의 포함)에 참여한 총 758명(중복 제거)을 대상으로 같은 공모사업에 3년 이상 연속 위촉된 경우에 해당함

특히 ‘ㄱ’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위촉이 가능한 규정¹⁴⁾을 마련하여 운영함에 따라 [별표] “공모사업 외부 심의위원 3년 이상 연속 위촉 내역”¹⁵⁾과 같이 동일한 심의위원이 3년 연속 위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7] 동일인이 같은 공모사업 심의위원으로 연속 위촉된 사례(2018년~2023년)

연속 위촉 횟수	합계	3년	4년	5년	6년
연속 위촉 인원	23명	15명	5명	1명	2명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⑦ 공모사업 심의 시 심의위원과 심의 대상기관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등에 대한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단은 [표 8]과 같이 ▲사업별 운영기준, 평가계획 등에 구체적인 회피 사유(심의 대상기관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경력이 있는 자 등)를 명시하고 회피 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연번 ⑩~⑰) ▲회피 신청 서식은 있으나 회피 사유를 모호하게¹⁶⁾(평가위원이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고(연번 ①~③) ▲회피 사유에 대한 기준을 평가계획 등에 따로 정하지 않고 조달청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기도 하며(연번 ④) ▲평가계획 등에 회피 사유에 대한 기준과 회피 신청 서식을 마련하지 않아 심의위원에게 회피제도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참여를 제한하

14) ‘ㄱ’ 사업 운영기준 ‘3. 추진체계 (4) 심의위원회 (다)’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15) 2018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 공모사업 심의(주관사 통한 공모사업 심의 포함)에 참여한 총 758명(중복 제거)을 대상으로 같은 공모사업에 3년 이상 연속 위촉된 경우에 해당함

16) 제척사유가 평가위원이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만 모호하게 제시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예시: • 심의위원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사업 신청 주체인 경우 •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지원사업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상근 임직원인 경우 • 심의위원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인 경우 등)

지 못할 우려가 있는(연번 ⑤~⑨) 등 공단의 심의위원 회피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표 8] 공모사업 심의위원 제척, 회피 등 기준 운영 현황

연번	사업명	자체 기준 여부 (관련 근거)	운영 방식
①		기준 모호 (회피신청서)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모호함 *평가 지자체(지자체 사업담당자 등)와 평가위원이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있는 경우
②		기준 모호 (회피신청서)	
③		기준 모호 (평가계획)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모호함 *심사대상 주관 사업에 참여한 교수 등 제척 사항(학연, 혈연, 지연) 확인
④		없음 (운영상 타 기준 준용)	자체 기준*은 없으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준용하여 운영(회피신청 서식은 있음) *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경우 ▲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등
⑤		없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지 않음
⑥		없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지 않음
⑦		없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지 않음
⑧		없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지 않음
⑨		없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지 않음
⑩		있음 (운영기준)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 ▲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과 별도의 협약, 용역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지원 기업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연도 다른 운영기관 참여인력으로 소속된 자 ▲ 해당 평가결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등
⑪			
⑫		있음 (운영계획 등)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 ▲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⑬			
⑭			
⑮		있음 (평가계획)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 ▲ 신청대학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사업의 참여자(전임교원 등) ▲ 총괄책임자(PM) 최종학위(단과대학)에 소속된 자 또는 최종학위(단과대학) 동문인 자 ▲ 평가대상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물리, 회계 등) ▲ 평가대상사업 참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⑯			
⑰			
⑱		있음 (위원 안내자료)	자체 기준*과 회피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경우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등
⑲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⑧ 공단은 공모사업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으로부터 받은 서약서¹⁷⁾(공정심의, 보안, 청렴 등 서약)에 따른 심의위원 의무 위반 시 심의위원 해촉, 자격 제한 기간 등 제재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자격요건(결격사유 포함)에 대한 검증이 이

17) 공단은 심의 당시 심의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정직과 신뢰 원칙에 따른 성실한 평가, ▲공사를 구분한 공정한 평가,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 금지, ▲평가와 관련된 사실 외부누설 금지) 등을 제출받고 있으나, 서약 사항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어 [표 3] 타 기관의 사례와 같이 실효적 제재방안 강구 필요

루어지지 않은 전문가명부(위원 POOL) 등을 활용하여 공모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직접 지정하여 위촉하거나 동일인을 같은 공모사업에 반복적으로 위촉하는 등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¹⁸⁾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앞으로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면서 공모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포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전문가명부(위원 POOL)를 등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 위촉 시 전문가명부(위원 POOL) 등을 활용하여 후보자 배수와 섭외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무작위 추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기준과 동일한 심의위원이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3년 연속 참여 제한 등)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의무(이해관계 있는 경우 회피, 비밀유지 등) 및 위반 시 제재(해촉, 일정 기간 자격 제한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8) 공단은 [표 3]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사례”(서약 사항 위반 시 심의위원 해촉, 2~10년간 심의위원 자격 제한 등)와 같이 심의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공모사업 외부 심의위원 3년 이상 연속 위촉 내역(2018년~2024년 4월)

공모주체	심의연도	공모사업명	심의단계	위원명	연속횟수	소속				
	2020		발표		3회					
	2019		서면+발표							
	2018									
	2024		발표		3회					
	2023		발표							
	2022									
	2022		발표		5회					
	2021		서면+발표							
	2020		발표							
	2019									
	2018									
	2023		서면+현장		3회					
	2022		서면							
	2021		서면+현장							
	2023		서면		4회					
	2022									
	2021		서면+발표							
	2020									
	2024		서면+현장+발표		3회					
	2023									
	2022		현장+발표		4회					
	2023									
	2022		서면							
	2021	서면+발표								
	2020									
	2023			서면	3회					
	2022									
	2021									
	2023		발표 등		3회					
	2022									
	2021									
	2023		서류+발표		6회					
	2022		서류							
	2021		서류+발표							
	2020		본선							
	2019		예선							
	2018									
	2022		서류+발표		3회					
	2021		서류							
	2020		본선							
	2023		서류+발표		3회					
	2022									
	2021		서류		3회					
	2023									
	2022		서류+발표		3회					
	2021		서류							
	2023									
		2024		서류		6회				
		2023		서류+발표						
		2022								
2021		서류								
2020		서류+발표								

공모주체	심의연도	공모사업명	심의단계	위원명	연속횟수	소속
	2019					
	2022		서류+발표		4회	
	2021					
	2020					
	2019		서류+발표 발표		4회	
	2024					
	2023					
	2022		서류+발표			
	2021					
	2022		서류+발표		3회	
	2021					
	2020					
	2023		서류		3회	
	2022		서류+발표			
	2021		발표			
	2022		서류		3회	
	2021		서류+발표			
	2020					
	2023		발표		4회	
	2022		서류+발표			
	2021		발표			
	2020		서류+발표		3회	
	2022		서류+발표			
	2021		서류			
	2020		서류+발표		3회	
	2022					
	2021					
	2020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스마트 조깅트랙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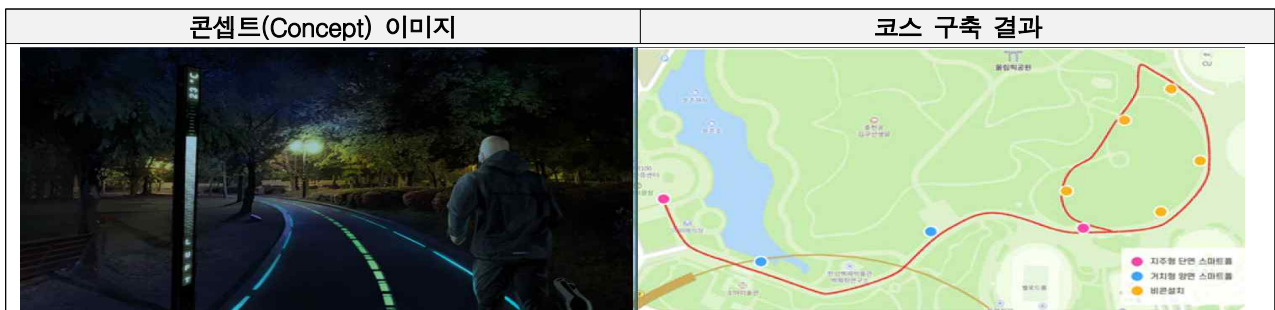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20. 6. 30.부터 2021. 3. 31.까지 5G 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¹⁾의 일환으로 [그림 1]과 같이 올림픽공원 산책로(왕복 2.4km)²⁾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스마트 조깅트랙 코스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사업명: 5G 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 계약기간: 2021. 6. 30. ~ 2021. 3. 31., 소요예산: 1,148백만 원 (스마트 조깅트랙 구축비: 111백만 원), 계약상대자: ○○

2) 평화의 광장에서 88잔디마당까지 왕복 2.4km 구간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올림픽공원 산책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① 운동량 등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 ②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통신기기 및 ③ 구간별 운동량 정보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폴³⁾로 구성되어 있고, 모바일 앱을 실행한 사용자는 스마트 폴에 설치된 통신기기와 모바일 앱 통신으로 운동량 정보 등을 스마트 폴의 영상표시장치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한편 공단은 앱 마켓⁴⁾에서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구간별 스마트 폴에 홍보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그림 2]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⁵⁾ 제44조에 따

3) 기존의 가로등, 영상표시장치, CCTV 등을 하나로 합쳐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기. 산책로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지주형 2식, 조명시설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형 2식 등 총 4식
 4)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유통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있음
 5)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13. 일부개정, 2013. 8. 27. 제정)

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관리⁶⁾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예산을 지출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성과 없이 단기간 운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은 2021. 3. 31. 시스템 준공 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 시스템을 위탁운영⁷⁾하였고, 이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는 위탁운영 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⁸⁾

이번 감사기간 중 시스템 성과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탁운영 기간(2021. 4. 1.~2021. 12. 31.) 동안 648명⁹⁾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직접 운영·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단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설치·실행하여야 하는 모바일 앱을 2022년 7월 이후 불상의 날¹⁰⁾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앱 마켓에 게시

6)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 개선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7) 수탁자: 주식회사 △△, 계약금액: 132백만 원

8) 2022년 7월부터 업무이관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센터(현 ㉠팀)에서 ◆◆ ★실(올림픽파크텔 운영)로 운영·관리 담당 부서를 변경함

9) 공단 직원 20여 명 포함

10)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였던 전 ♥센터 B대리는 2022년 3월 모바일 앱을 앱 마켓에 등록하였고, 2022년 7월 시스템 운영·관리부서를 ★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영·관리를 인계받은 ★실 C차장은 시스템 인계 시 모바일 앱 내려받기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언제부터 앱 마켓에서 내려받기가 되지 않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하지 않아서¹¹⁾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올림픽공원 산책로에서 시스템 사용을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공단은 2022년 1월 이후부터 시스템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통신료, 스마트폰 앱 서버 사용료 등)를 [표]와 같이 지출하고 있었다.

[표]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예산 집행 내역

구분		예산(천 원)
2020년~2021년	구축비	111,100
2022년	운영비	4,460
2023년	운영비	5,317
2024년 1월~4월	운영비	1,802
합계		122,679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공단은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부터 시스템의 오류·사용자 민원 처리,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산출물¹²⁾과 모바일 앱을 유통할 수 있는 앱 마켓에 대한 권한¹³⁾을 제출받지 않아서 모바일 앱을 앱 마켓에 다시 게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총 122백만 원을 집행하여 구축·유지관리 중인 시스템이 당초 구축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

11)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여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12) 컴퓨터프로그램 명세서, 소스(Source) 등 모바일 앱 유지관리를 위한 산출물

13) 모바일 앱을 앱 마켓에 등록할 때 사용한 권한(계정)은 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주)○○가 소유하고 있었음

한 산출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 등을 소홀히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이 구축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 재사용 가능성 및 재사용 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폴(영상표시장치) 등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소장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올림픽공원 내에 [표 1]과 같이 소마미술관¹⁾, 서울올림픽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인 국립체육박물관²⁾은 2026년 9월 개관 예정이다.

[표 1] 미술관 및 박물관 현황(2024년 4월 기준)

구분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기념관	국립체육박물관
종류(유형) ^{주)}	제1종 미술관	제1종 전문박물관	-
등록일	1998.12.31.	2001.09.27.	-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장품	297점 (조각작품 221점 제외)	18,442점	47,546점
수장고	2개(총 286.83㎡)	임시 수장고 1개(325㎡)	임시 수장고 3개(총 461㎡)

1) 개관 시 명칭은 서울올림픽미술관이었으나, 2006년 1월 소마미술관(Seoul Olympic Museum of Art)으로 명칭 변경함

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으로 대한민국 체육역사 및 유산의 체계적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시 및 정보제공 등 체육문화 중심 기능 수행
- ▶ (사업기간) 2016~2025년 / 2026년 9월 개관 예정
- ▶ (건립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부지 내
- ▶ (규모) 총 연면적 5,228㎡ / 지하 2층~지상 4층(옥상 포함)
- ▶ (총사업비) 26,355백만 원

비고	리모델링 휴관 중(2018년 7월~)	개관 예정(2026년 9월)
----	----------------------	-----------------

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소장자료, 학예사 수,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자료 :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공단은 관별 수장고를 구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 자체 「소마미술관 및 올림픽조각공원 운영지침」(이하 “미술관지침”이라 한다), 「기념관 운영지침」(이하 “기념관 지침”이라 한다) 및 「국립체육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박물관 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라 소장품³⁾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술관 지침 제33조 제1항 및 기념관 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박물관 지침 제31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수장고 관리일지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⁵⁾

따라서 공단은 소장품을 반출입하거나 직원 및 외부인이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소장품 내역, 출입자, 출입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소장

3) 미술관 지침에서는 ‘작품’, 기념관 지침에서는 ‘소장품’, 박물관 지침에서는 ‘유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하 ‘소장품’으로 약칭함

4) 기재사항: 날짜, 출입사유, 열쇠반출자, 출입자, 출입시간, 반납자, 반납확인자

5) 국립체육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지침에 수장고 관리일지 양식을 별지로 정하고 있으나, 소마미술관 및 서울올림픽기념관의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소마미술관 수장고 출입일지 기재사항: 출입일자, 출입자, 점검사항(작품반출입, 온·습도, 정리정돈), 비고(특이사항)
- 서울올림픽기념관 수장고 관리일지 기재사항: 날짜, 출입사유, 열쇠반출자, 출입자, 출입시간, 반납, 반납확인자

품의 훼손·분실 등을 예방하는 등 소장품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공단 소관 미술관·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출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소마미술관은 소장품을 반출입하면서 소장품 수량만 기재하고 누구의 어떤 작품을 반출입하는지 기재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올림픽기념관과 국립체육박물관은 대여, 훈증⁶⁾, 보존처리, 전시 등을 위해 소장품을 반출입하면서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장고 소독을 위해 외부인이 수장고에 출입하였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미술관 및 박물관 소장품 이동 및 수장고 출입기록 관련 부적정 사례

구분	연도	소장품명(수량)	내역(사유)	반출일	반입일 ^{주)}	확인된 문제점
소마 미술관	2021		공단 내부 대여	3. 26.	10. 26.	반입기록 없음
			1수장고 반출	4. 6.	-	작가·작품명 미기재
			1수장고 반입	-	4. 6.	작가·작품명 미기재
			1수장고 반출	4. 6.	-	작가·작품명 미기재
			1수장고 반입	-	4. 6.	작가·작품명 미기재
			1수장고에서 2수장고로 이동	7. 27. (1수장고)	7. 27. (2수장고)	2수장고 반입기록 없음
			1수장고에서 2수장고로 이동	8. 6. (1수장고)	8. 6. (2수장고)	2수장고 반입기록 없음
	2023		2수장고 반출	9. 8.	-	작가·작품명 미기재
	2024		2수장고 반입 (D 20점 포함)	-	2. 19.	55점 작가·작품명 미기재
서울 올림픽 기념관	2021		외부기관 대여	12. 10.	'22. 10. 13.	반출입기록 없음
	2022		외부기관 훈증	8. 30.	9. 1.	반출입기록 없음
			공단 내부 대여	10. 14.	10. 24.	반출입기록 없음
			공단 내부 대여	10. 28.	10. 31.	반출입기록 없음
국립	2021		외부기관 수장고 소독	9. 10.	9. 11.	외부기관 출입기록 없음

6) 소장품 등이 각종 미생물·곰팡이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운 연기나 가스를 사용하여 살충·살균하는 소독

체육 박물관			외부기관 보존처리	9. 24.	12. 10.	반출입기록 없음
		2022	외부기관 수장고 소독	12. 5.	12. 6.	외부기관 출입기록 없음
	2023		외부기관 수장고 소독	11. 28.	11. 29.	외부기관 출입기록 없음
			3 수장고 유물 일부 2수장고로 이동	6. 22.	-	유물명 미기재 2수장고 반입기록 없음
			전시	9. 12.	12. 12.	반출입기록 없음

주: 대여(반납), 훈증, 보존처리, 전시, 수장고 소독 등 내부결재 문서와 수장고 일지 비교·대조를 통해 확인함

자료 :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소장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⁷⁾ 소장품 이동 및 외부인 출입에 따라 소장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소장품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장품의 이동 내역 및 수장고 출입기록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4)번

7) 감사기간 중 일부 소장품(㉠ 등 35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공단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직원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제2014-101호, 2014. 4. 7.)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특정 임원의 의사에 따라 승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승진 시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되, 그 회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단은 채용, 승진, 직권면직, 포상, 징계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인사관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 및 표결 내용¹⁾ 등 실질적인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별표]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같이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 직원 인사 전반에 관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개최한 총 29회²⁾ 중 5회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³⁾


특히 공단 ㉔팀에서 특정감사 결과 중징계를 요구⁴⁾한 사안에 대하여 2023.

4. 18. 개최한 4차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감봉 처분⁵⁾을 하였으나, 징계양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관리위원회 논의도 확인되지 않는 등 승진, 포상은 물론 징계 등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인사관리위원들의 논의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중요한 인사 사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인사규정」 제10조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심의로 개최한 횟수(19회)를 제외한 수치임

3) 서면심의 안건(20개)을 제외한 안건 총 56개 중 7개 안건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함

4) 우는 ㉔팀-109(2023.01.08.)호 ‘ AR시스템 도입 특정감사 결과 알림’으로 ↑에게 5급 E, 5급 F의 AR시스템 검사처리 부적정, 하도급 관리 소홀 등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였음

5) 인사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5급 E, 5급 F 모두 감봉 3개월로 처분함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인사제도 운영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현황(2021년~2024년 4월)

연도	개최일	차수	안건	회의록 유무
2021	2021.02.25.	1차		○
	2021.03.29.	2차		○
	2021.04.13.	3차		x
	2021.06.11.	4차		x
	2021.06.18.	5차		x
	* 차수 오류	6차		
	2021.07.14.	7차		(서면)
	2021.07.20	8차		(서면)
	2021.08.19.	9차		○
	2021.08.20.	10차		(서면)
	2021.10.26.	11차		(서면)
	2021.10.28	12차		(서면)
	2021.11.30.	13차		(서면)
	2021.12.03.	14차		x
	2021.12.10.	15차		(서면)
	2021.12.21.	16차		x
소계	8회 안건 15개(서면 7회 안건 8개 제외) 중 5회 11개 안건 미작성			
2022	2022.04.15.	1차		x
	2022.05.03.	2차		○
	2022.06.22.	3차		x
	2022.06.28.	4차		(서면)
	2022.08.26.	5차		(서면)
	2022.10.20.	6차		(서면)
	2022. 11.02.	7차		x
	2022.11.30.	8차		x
	2022.12.02.	9차		(서면)
	2022.12.02.	10차		x
	2022.12.07.	11차		(서면)

연도	개최일	차수	안건	회의록 유무
	2022.12.21.	12차		x
	2022.12.21.	13차		x
소계	8회 안건 18개(서면 5회 안건 5개 제외) 중 7회 17개 안건 미작성			
2023	2023.03.08.	1차		x
	2023.03.10.	2차		x
	2023.04.14.	3차		x
	2023.04.18.	4차		x
	2023.05.24.	5차		x
	2023.06.05.	6차		x
	2023.06.22.	7차		x
	2023.06.27.	8차		x
	2023.08.21.	9차		(서면)
	2023.08.17.	10차		(서면)
	2023.09.20.	11차		(서면)
	2023.11.01.	12차		(서면)
	2023.11.23.	13차		x
	2023.11.24.	14차		x
	2023.11.27.	15차		(서면)
	2023.12.11.	16차		x
	2023.12.08.	17차		(서면)
	2023.12.14.	18차		(서면)
	2023.12.22.	19차		x
소계	12회 안건 21개(서면 7회 안건 7개 제외) 중 12회 21개 안건 미작성			
2024	2024.04.15.	1차		○
계	1회 안건 2개 모두 작성			
총계	29회 안건 56개(서면심의 19회 안건 20개 제외) 중 5회 7개 안건 작성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단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¹⁾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2021년~2024년 3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월	합계 ^{주)}
겸직허가	인 원	49명	47명	47명	16명	77명
	건 수	117건	107건	97건	17건	338건
외부강의 등 신고	인 원	88명	121명	129명	54명	195명
	건 수	389건	536건	582건	91건	1,598건

주: 중복인원 제외

자료 :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행동강령 제26조 ①)

2. 겸직에 대한 복무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²⁾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단 「정관」 제20조, 「인사규정」 제133조 및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공단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단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단 「겸직 허가계획」³⁾ 내 ‘겸직 복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겸직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휴가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출장·외근⁴⁾으로 복무 처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표 2] 겸직 허가계획^{주)}

구분	내용	
겸직 허가 대상	①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에 따라 겸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 ②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고자 하는 임직원	
겸직 복무 처리기준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개인휴가 및 근무상황기록부(조퇴, 외출O, 외근X), 유연근무제 활용 * 출장처리 불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

-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를 말하며, 같은 예규 내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 (기관·단체 임원)’에 의하면 사기업체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 ☞팀400(2021.02.09.)호 ‘2021년 상반기 겸직 신청 및 2020년 하반기 결과보고 제출요청’ 등 반기별로 겸직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 시행함
- 4) 「복무규정」 등에 외근의 정의, 출장지 범위, 여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외근은 근무지 내에서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가 있을 경우 복무 상황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복무 유형으로, 출장과 다르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겸직 허가절차	① 겸직신청	⇒	② 겸직허가 결정	⇒	③ 겸직허가 결과 통보
	신청자 → 부서장 → ☞팀		인사팀(검토) → 감사실(일상감사) → 이사장		☞팀 → 부서장
결과보고	겸직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주: 2021년~2024년 상·하반기 겸직 허가계획 모두 동일한 내용임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단은 소속 임직원이 이사장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겸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복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외근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공단 임직원의 겸직허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⁵⁾ ㉠ 선임연구위원 G의 경우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회 이사(2023. 1. 1.~2024. 12. 31.)⁶⁾ 등 3개 민간단체⁷⁾에 임원 등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등 [별표] “사전허가 없이 민간단체 임원 등 겸직한 부적정 명세”와 같이 소속 직원 22명이 비상근 또는 무보수 직위라는 이유 등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15개 체육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⁸⁾⁹⁾

또한 ㉠ 선임연구위원 H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2023. 6. 11(일). 학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한

5) 공단 직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임원 등으로 위촉되어 있는 14개 민간단체 및 공단 직원 대상 조사 중 인지된 1개 민간단체(∇∇학회)를 대상으로 해당 민간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함

6) 이사직과 함께 ◇◇학회 학술위원, 편집위원, 여성위원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음

7) ◇◇학회 이사 외에 ☆☆학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2021. 2. 10.~2025년 1월), ■■학회 이사(2024. 3. 9.~2025. 12. 31.)로도 위촉되어 있음

8) ☆☆학회 등 15개 민간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회의 참석 등으로 소액의 사례금을 수령(회당 3만 원~ 10만 원)한 외에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9) 공단 직원 21명은 [별표] “사전허가 없이 민간단체 임원 등 겸직한 부적정 명세”에 기재된 민간단체의 비상근·무보수 직무 수행을 위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뒤10)11), 여비를 지급 받는 등12)13), [표 3]과 같이 공단 직원 7명은 겸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복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이나 외근으로 복무 처리를 하고 있는 데도 공단은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14)

[표 3] 겸직허가 없이 민간단체 직무를 수행하면서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명세(2021년~2024년 4월)

연번	성명 (직급)	겸직기관명 (겸직직위)	활동내역			
			일시	장소	활동내용	복무 처리
1			2023.05.08.(월) 10:30	공단 사무실,	2023년도 제1차 자격검정 실무위원회	복무 미처리
2			2023.02.28.(화) 15:00	공단 사무실, 비대면	제1차 이사회 회의	복무 미처리
3				2023.06.16.(금) 14:00	◆◆ 회의실	국가자격화준비 위원회 제2차 회의
		2023.09.22.(금) 16:00	공단 사무실, 비대면	국가자격화준비 위원회 제3차 회의	복무 미처리	
4			2021.04.15.(목) 14:00	협회 회의실	2021년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외근
			2023.02.02.(목) 12:00	▼▼	경기력향상위원회 워크숍	외근
			2023.04.25.(화) 14:00	협회 회의실	2023년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외근
			2024.04.23.(화) 14:00	협회 회의실	2024년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외근
			2023.01.18.(수) 14:30	강남역 회의실	학술위원회 회의	외근
			2023.02.07.(화) 15:00	강남역 회의실	학술위원회 회의	외근
			2023.05.12.(금) 15:00	★★ 회의실	학술위원회 회의	외근

10) 2023. 6. 1. 출장번호: 2023060119023 [기안(H), 전결(실장 J)]

11) H는 1박 2일 출장 결재를 받고 ☐☐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2023. 6. 10.(토)] 및 이사회(2023. 6. 11.(일))에 참석하였는바, H가 2023. 6. 10. 춘계학술대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것은 「2023년 연구직 학술활동추진 계획」*에 따라 출장처리와 여비 일부 지원(숙박비 제외)이 가능함

* 「2023년 연구직 학술활동계획」(○-130호, 2023.01.25.)

- (목적/대상) 학술활동 증진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등/ Ⅲ 소속 연구직 직원
- (지원내용) 학술대회 논문 발표 지원(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좌장)
- (지원내용) 참가 등록비 및 여비 일부 지원(일비, 식비, 유류비, 통행료)

12) 공단은 1박 2일 출장비 총 148,293원(운임 73,293원, 일비 25,000원, 식비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3. 6. 11.(일) 이사회 참석 출장과 관련된 여비는 37,500원임(일비 12,500원* + 식비 25,000원)

* 공단 「여비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비(25,000원)의 1/2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음

13) ▽▽학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춘계학술대회나 이사회 참석으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4) 공단은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한 1건 외에 2021년 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2024.02.07.(수) 16:00	강남역 회의실	학술위원회 회의	외근
5			2024.02.07.(수) 17:00	공단 사무실, 비대면	자격관리위원회 회의	복무 미처리
6			2021.01.26.(화) 14:00	○○ 회의실	이사회	외근
			2022.01.25.(화) 14:00	○○ 회의실	이사회	외근
			2022.02.25.(금) 10:00	○○ 회의실	학회 워크숍 참석	외근
			2024.03.15.(금) 15:00	☞☞ 회의실	이사회	외근
			2023.06.11.(일) 10:00	▣▣ 예술의전당	이사회	출장
7			2021.04.15.(목) 15:00	협회 회의실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	외근
			2021.06.02.(수) 12:00	협회 회의실	2021년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	외근
			2021.06.29.(화) 09:30	협회 회의실	2021년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	외근
			2022.02.10.(목) 11:00	공단 사무실, 비대면	2022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	복무 미처리
			2022.06.08.(수) 11:00	협회 회의실	채용면접 및 2022년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	외근
			2022.06.29.(수) 09:00	협회 회의실	2022년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	외근

자료: 공단 및 민간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3.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¹⁵⁾

그리고 공단의 '외부강의 등 복무 처리 및 신고 기준'¹⁶⁾에 따르면 [표 4]와

15) 단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16) ☎팀-1060(2019.04.17.)호 'KSPO 외부강의 등 신고제도 운영 계획 변경 시행(안)' 및 ☎팀-3965(2022.12.28.)호 'KSPO 복무·휴직 매뉴얼 개정'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개인휴가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외부강의 등 복무 처리 및 신고 기준

구분		복무 처리(근무시간 內)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여부
직무관련성 有	대가 有	개인휴가, 유연근무제 활용	O
	대가 無	출장, 근무상황기록부(외근)	X
직무관련성 無	대가 有	개인휴가, 유연근무제 활용	O
	대가 無		X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장(대가수령 시 여비 X), 근무상황기록부(외근)	X
겸직허가 받은 건		개인휴가, 유연근무제 활용	X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단은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월 상한 횟수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개인휴가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복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공단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승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5]와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상한 횟수(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5] 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상한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명세(2021년~2024년 3월)

(단위: 원)

연번	성명 (직급)	연월	일	기관명	활동내용	수령액	신고 여부
1		2021년 8월	20일		토론	100,000	미신고
		2022년 6월	24일		토론	200,000	미신고
2		2021년 8월	4일		강의	400,000	신고
			5일		강의	400,000	신고
			11일		강의	400,000	신고
			18일		심사	150,000	신고
3		2022년 10월	11일		심사	200,000	신고
			17일		평가	200,000	신고
			18일		평가	200,000	신고
			24일		심사	200,000	신고
4		2023년 11월	2일		자문	300,000	자연신고 (2021. 1. 16.)
			15일		자문	300,000	자연신고 (2021. 1. 16.)
			23일		자문	300,000	자연신고 (2021. 1. 16.)
			28일		자문	300,000	자연신고 (2021. 1. 16.)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㉔ 선임연구위원 I 등 3명은 [표 6]과 같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복무를 처리하지 하지 않거나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외근으로 처리하였는데도, 공단은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¹⁷⁾

[표 6] 외부강의 등 복무 처리 부적정 명세(2021년~2024년 3월)

(단위: 원)

연번	성명 (직급)	일시	장소	기관명	활동내용	수령액	복무 처리
1		2022.06.24.(금) 10:00~12:00	롯데 호텔월드		토론	20,0000	복무 미처리
2		2021.05.21.(금) 14:00~16:00	♡♡		심사	150,000	외근
		2021.10.12.(화) 10:00~1200	♡♡		심사	150,000	외근

17) 공단은 외부강의 등 처리 내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상한 횟수를 초과한 직원 및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등에 대해 조치한 바 있음

3		2022.5.10.(화) 16:00~18:00	☞☞		토론	250,000	외근
---	--	------------------------------	----	--	----	---------	----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직 및 외부강의에 대한 집중교육 및 위반행위 일제점검 등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 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고 겸직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임직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거나 겸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복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이나 외근으로 복무를 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이사장에게 신고 하지 않거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 상한 횟수·시간을 초과하여 외 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개인휴가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주의)
- ② 겸직 및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표 3]에 기재된 관련자, [표 5]에 기재된 관련자, [표 6]에 기재된 관련자 및 [별표] “사전허가 없이 민간 단체 임원 등 겸직한 부적정 명세”에 기재된 관련자에 대하여 위반 경위·횟 수·정도 등을 고려하여¹⁸⁾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복무규정」과

다르게 출장으로 복무 처리를 하고 겸직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8) M 및 N의 경우 공단 자체 감사에서 외부강의 등의 복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받은 바 있음

[별표]

사전허가 없이 민간단체 임원 등 겸직한 부적정 명세(2021년~2024년 3월)^{주1)}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사전허가 없이 겸직한 내역				
			민간단체명	직위	위촉기간 ^{주2)}	활동내역 ^{주3)}	총 수령금액
1				인사위원회 위원	2021.02.10.~ 2025.01.30.	인사위원회 참석	-
2				이사	2023.01.01.~ 2024.12.31.	-	-
3				부회장	2023.01.01.~ 2025.12.31.	이사회 참석	-
4				연구·기술위원회 위원	2021.06.02.~ 2025.01.26	연구 및 기술 관련 자문	60,000 (2회 참석)
5				이사	2020.03.01.~ 2022.02.28.	총회 참석	-
				부회장	2024.02.27.~ 2025.12.31.	학회지 발간, 이사회 참석	-
				편집위원장	2024.01.09.~ 2025.12.31.		
6				기획이사	2022.03.01.~ 2025.02.28.	이사회 참석 등	-
7				당연직 부회장	2020.01.01.~ 보직기간	이사회 참석 등	-
8				연구·기술위원회 위원	2021.06.02.~ 2025.01.26.	-	-
9				이사 /국가자격화 준비위원	2023.03.01.~ 2025.02.28	위원회 참석 등	-
10				이사	2023.01.01.~ 2023.12.31.	-	-
				이사	2020.01.01.~ 2025.12.31.	이사회 참석 등	-
11				부회장	2022.01.01.~ 2023.12.31.	-	-
12				♀위원회 위원	2022.06.22.~ 2025년 1월	위원회 참석	-
13				이사	2023.01.01.~ 2024.12.31	-	-
				운동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 9월~ 2023년 8월	운동 프로그램 작성	-
				이사	2023년 12월~ 2025년 10월	학회 교과서 집필 예정	-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사전허가 없이 겸직한 내역				
			민간단체명	직위	위촉기간 ^{주2)}	활동내역 ^{주3)}	총 수령금액
14				경기력향상 위원회 위원	2021.02.10.~ 2025년 1월	위원회 참석	-
				일반이사 /학술위원 /편집위원 /여성위원	2023.01.01.~ 2024.12.31	위원회 참석	-
				이사	2024.03.09.~ 2025.12.31.	-	-
15				공인위원회 위원	2022.05.09.~ 2024.05.09..	위원회 참석	200,000 (2회 참석)
16				이사	2024.02.26.~ 2025.12.31.	-	-
17				이사	2024.01.01.~ 2025.12.31.	이사회 참석	-
18				이사	2023.01.01.~ 2024.12.31	-	-
19				자격관리위원	2023.03.01.~ 2025.02.28.	위원회 참석 등	-
20				이사	2020.03.30.~ 2025.12.31.	학술관련 연구·기획	-
				이사	2023.01.01.~ 2023.12.31.	학술관련 연구·기획	-
21				국제이사	2023.04.30.~ 2025년 4월	-	-
				이사	2023.03.01.~ 현재	학술지 편집 관련 업무	-
22				인사위원회 위원	2022.01.01.~ 2025.5.26.	위원회 참석	-
				이사	2023.01.01.~ 2024.12.31.	이사회 참석 등	-

주: 1. 겸직허가 없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데(공단 '외부강의 등 복무 처리 및 신고 기준'), 연번 4의 K 및 연번 15의 A는 사례금을 받았으나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음

2. 공단으로부터 사전허가 받고 겸직한 기간은 제외함

3. 학회 등은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학회장 선출 시마다 학회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학회장 소속 대학교)도 변동됨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과거 활동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단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확인된 내역만 기재함

자료: 공단 및 민간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시정요구·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¹⁾, 공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기관과 연구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산출내역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의 연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단은 2021. 7.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회와 ‘ㄷ 용역’ 계약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19,996,900원)으로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가 지급을 청구하자 계약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하여 부가가치세 1,817,9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²⁾

3. 선금 채권 보전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³⁾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2)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및 용역대가 지급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산출내역서(작성일: 2021. 6. 22.) 및 전자 세금계산서(작성일: 2021. 11. 24.) 등을 제출함에 따라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

3)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보증기간을 준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연장되는 이행기간이 가산된 선금보증서를 받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의 선금 채권 보전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단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증기간(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 및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되는 이행기간이 가산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규정 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표 1]과 같이 15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 총 3,193백만 원을 지급한 후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보증기간이 짧은 선금보증서를 제출받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에 가산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적정한 선금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선금 보증기한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재정 악화 등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표 1] 선금 채권 보전조치 부적정 사례(2021년~2024년 4월)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최초계약일 (변경계약일)	최초이행기한 (변경이행기한)	선금 채권 보증기한		선금지급액
					보증서 상 보증기한	정당 보증기한	
1			2021.01.28. (2021.12.09.)	2021.11.30. (2021.12.15.)	2022.02.06.	2022.02.13.	78,650
2			2021.02.25.	2021.05.31	2021.07.30.	2021.08.29	151,760

		(2021.05.28.)	(2021.06.30.)			
3		2021.08.04. (2021.10.21.)	2021.11.21. (2021.12.28.)	2022.01.20.	2022.02.26.	54,824
4		2021.09.02. (2021.11.18.)	2021.11.30. (2022.01.31.)	2022.01.29.	2022.04.01.	58,289
5		2021.09.14.	2021.12.15.	2022.01.29.	2022.02.13.	108,000
6		2021.12.24.	2022.09.10.	2022.10.10.	2022.11.09.	1,100,000
7		2022.05.13. (2022.05.13.)	2023.02.28. (2023.04.30.)	2023.04.29.	2023.06.29.	27,500
8		2022.07.12. (2022.10.27.)	2022.11.10. (2022.11.30.)	2023.01.09.	2023.01.29.	91,000
9		2022.09.20. (2023.04.17.)	2022.12.23. (2023.06.30.)	2023.02.23.	2023.08.29.	36,300
10		2022.10.07. (2022.12.05.)	2022.12.31. (2023.03.15.)	2023.03.01.	2023.05.14.	916,650
11		2022.08.29. (2022.11.22.)	2022.11.26. (2022.12.31.)	2023.01.25.	2023.03.01.	30,800
12		2022.05.06. (2022.02.28.)	2023.02.28. (2023.04.30.)	2023.04.29.	2023.06.29.	27,500
13		2023.06.26. (2023.08.16.)	2023.07.22. (2023.08.31.)	2023.09.20.	2023.10.30.	2,832
14		2022.04.12. (2023.07.21.) (2023.09.06.)	2022.07.22. (2023.08.31.) (2023.09.27.)	2023.09.20.	2023.11.26.	49,0000
15		2023.10.30. (2024.02.19.)	2024.01.31. (2024.05.31.)	2024.03.31.	2024.07.30.	19,180
계(15건)						3,193,285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4.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방법 제한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3. 6. 1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⁴⁾,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2018. 6. 4. 입찰참가업체의 방문비용, 책자 인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함(2018. 6. 7. 시행)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3. 6. 16.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⁵⁾ 전자조달시스템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하였다.⁶⁾

따라서 공단은 제안서 제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 맞게 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허용해야 하며, 제안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제출하도록 제한하여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단은 계약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한 총 206건 중 99%에 해당하는 205건에 대하여 방문 접수만 허용하고 있었다.⁷⁾

특히 ○본부는 주말 근무 후 평일 중 휴무를 실시하여⁸⁾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는 평일 근무일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리 용역(계약금액: 1,804백만 원)’ 등 [별표] “제안서 방문 접수 기간 현황”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본부가 입찰공고한 43건 모두에 대해 제안서 방문 접수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⁹⁾¹⁰⁾

5) 출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기획재정부 제·개정 이유서

6) 2023. 6. 30. 시행됨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에 따라 2023. 6. 30. 이후에는 인편 제출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처리장치 제출이 원칙이고, 용량·형태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본부직원의 근무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임(월요일, 화요일 휴무)

9) ○본부외 다른 부서는 방문 접수 기간을 5~11일로 설정함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다르게 제안서를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¹¹⁾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2018-505호, 2018. 12. 17.) 제도개선 권고(이하 “권익위 권고”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¹²⁾은 계약업체 선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¹³⁾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과 평가의 대상기관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해촉(선정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10) 제안서 제출이 용이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접수시작 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최소 48시간 이상 되도록 하고 있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고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이사장’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

12) 제도개선 권고 당시 1,141개 공직유관단체(공단 포함)

13)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기관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계약업체 선정 사항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 적용되며,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은 권고대상에서 제외됨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

기관명 (규정명)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비율)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확인 방법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발생 시 조치 방법
☐☐ (「계약업무 처리 규정」)	1억 미만 5명 / 1억 이상 7명 (외부위원 과반수)	평가위원에게 제척사유 등 고지하고 확인서 징구	<u>해당 안건의 전체 평가에서 제외</u> ※ 회피하지 않은 평가위원은 3년간 ☐☐ 주관 평가위원회 참여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5인 이상 7인 이하 (외부위원 과반수)	평가업체와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서약서 징구	<u>심의·의결에서 제외</u>
◀◀ (「계약사무 관리지침」)	5인 이상 (전원 외부위원)	평가위원에게 제척사유 등 고지하고 확인서 징구	<u>심의·의결에서 제외</u> ※ 회피하지 않은 평가위원은 3년간 ◀◀ 주관 평가위원회 참여 불가
○○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	7인 이상 (전원 외부위원)	평가위원에게 제척사유 등 고지하고 서약서 징구	<u>해당 안건의 전체 평가에서 제외</u>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익위 권고 및 [표 2]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수 설정,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구성,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수요 부서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공단은 평가위원 4명으로만 구성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명의 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고,¹⁴⁾ 전원 내부 평가위원만 참여한 4건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전체 206건 중 9%에 해당하는 19건으로 확인되는 등¹⁵⁾ 평가위원의 수 및 내·외부 평가위원 비율 등을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공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한 전체 206건 중 98%에 해당하는 202건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위원으로부터 회피 사유 유무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받거나 최근 용역, 자문, 연구 수행 현황을 제출받는 등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평가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평가 전체에 대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¹⁶⁾ [표 3]과 같이 이해관계 있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평가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회피 현황(2021년~2024년 4월)

(단위: 건)

연번	계약명	평가일	평가대상업체 (계약업체)	회피업체(사유)	회피 후 조치결과
1		2021.07.30.			심사 참여 (이해관계 있는 업체평가에서만 제외됨)
2		2021.08.05.			심사 참여

14) 'ㄱ' 용역(계약금액: 264백만 원), 'ㄴ' 용역(계약금액: 30백만 원)는 평가위원이 4명으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하면 2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낙찰자를 선정함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중앙행정기관(문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등) 대부분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50% 초과)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16) 특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나머지 업체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게 할 경우 평가점수를 과다 또는 과소 부여함으로써 이해관계 있는 특정업체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해관계 있는 업체평가에서만 제외됨)
3		2021.09.09.			심사 참여 (이해관계 있는 업체평가에서만 제외됨)
4		2023.06.19.			심사 참여 (이해관계 있는 업체평가에서만 제외됨)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면세사업자에게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고, 향후 국가계약법 및 계약사무규칙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 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면세사업자에게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 1,817,900원을 환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기간을 준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이 가산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는 등 선금 채권 보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할 때는 방문 접수만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③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본부 제안서 방문 접수 기간 현황(2021년~2024년 4월)

(단위: 천 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제출가능일시	제출가능시간
1		175,010	2021.01.06.13:00~16:00	3시간
2		341,982	2021.06.18.13:00~16:00	3시간
3		433,950	2021.06.23.13:00~16:00	3시간
4		113,345	2021.07.23.13:00~16:00	3시간
5		92,106	2021.08.26.13:00~16:00	3시간
6		74,400	2021.12.07.13:00~16:00	3시간
7		96,595	2021.12.15.13:00~16:00	3시간
8		165,165	2022.02.09.13:00~16:00	3시간
9		1,475,585	2022.03.11.13:00~16:00	3시간
10		85,360	2022.04.26.13:00~16:00	3시간
11		264,888	2022.04.27.13:00~16:00	3시간
12		200,000	2022.05.17.13:00~16:00	3시간
13		415,736	2022.06.02.13:00~16:00	3시간
14		193,930	2022.07.14.13:00~16:00	3시간
15		269,000	2022.07.26.13:00~16:00	3시간
16		141,761	2022.09.07.13:00~16:00	3시간
17		353,000	2022.11.30.13:00~16:00	3시간
18		98,485	2022.12.06.13:00~16:00	3시간
19		187,398	2023.02.01.13:00~16:00	3시간
20		283,000	2023.02.01.13:00~16:00	3시간
21		416,570	2022.03.11.13:00~16:00	3시간
22		150,000	2023.03.15.13:00~16:00	3시간
23		95,000	2023.03.17.13:00~16:00	3시간
24		133,970	2023.04.05.13:00~16:00	3시간
25		245,000	2023.05.17.13:00~16:00	3시간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제출가능일시	제출가능시간
26		345,400	2023.05.17.13:00~16:00	3시간
27		413,264	2023.06.08.13:00~16:00	3시간
28		324,500	2023.06.08.13:00~16:00	3시간
29		94,131	2023.06.14.13:00~16:00	3시간
30		1,335,000	2023.06.28.13:00~16:00	3시간
31		176,301	2023.06.28.13:00~16:00	3시간
32		135,000	2023.07.12.13:00~16:00	3시간
33		44,000	2023.08.29.13:00~16:00	3시간
34		235,955	2023.10.17.13:00~16:00	3시간
35		453,000	2023.11.23.13:00~16:00	3시간
36		1,804,580	2023.12.12.13:00~16:00	3시간
37		142,450	2023.12.19.13:00~16:00	3시간
38		1,031,000	2023.12.19.13:00~16:00	3시간
39		142,450	2023.12.19.13:00~16:00	3시간
40		162,100	2023.12.20.13:00~16:00	3시간
41		118,400	2023.12.21.13:00~16:00	3시간
42		173,390	2024.02.07.13:00~16:00	3시간
43		129,660	2024.02.21.13:00~16:00	3시간
계(43건)		13,761,817	-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직원주택 관리비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 치 기 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단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표 1]과 같이 공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¹⁾ 등을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근거지가 없는 근무지에 부임한 임직원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1] 직원주택 운영 현황(2021년~2024년 4월)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합계 ^{주)}
사택	인원	29명	35명	32명	32명	54명
	주택 수	31개소	43개소	39개소	34개소	70개소
기숙사	인원	53명	71명	83명	70명	117명
	주택 수	23개소	45개소	57개소	52개소	97개소

주: 중복인원 및 중복 주택 수 제외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직원에게 단독으로 제공하는 직원주택을 “사택”, 여러 명의 직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 ④ 경비 - (2) 복리후생비’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되,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택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료 등 관리비를 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되고, 직원주택에 거주하는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 제12조 및 [별표 2] “기숙사 관리비 부담범위”에 직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관리비는 전액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여러 명의 직원이 공동 사용하는 기숙사 관리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단은 [표 2]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 총 117명에게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료 등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총 78,853천 원을 부담시키지 않고 공단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연도별 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 현황(2021년~2024년 4월)

(단위: 천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계주)
지원금액 (지원주택 수 및 인원)	15,209 (23개소, 53명)	24,168 (45개소, 71명)	32,021 (57개소, 83명)	7,455 (52개소, 70명)	78,853 (97개소, 117명)

주: 중복인원 및 중복 주택 수 제외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직원 기숙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다르게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한 기숙사에 부과되는 관리비 중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조 치 기 관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시설물(올림픽공원, 미사리경정공원 등)을 관리·운영하면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산개발”이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¹⁾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²⁾, 스포츠센터 등의 운영 및 시설물 대관업무³⁾, 편익사업(주차 및 매점 운영 등)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체산개발은 공단 「정관」 제5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1990. 7. 25. 설립한 공단 100% 출자회사로서, 1990년부터 매년 공단과 경영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수탁사업을 수행함

2) 관리 수탁사업장 현황(25개소): 올림픽공원(KSPO DOME, 핸드볼경기장,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 벨로드롬, 수영장, 파크텔, 미술관, 올림픽회관, 스포츠비즈홀, 올림픽홀 등), 미사리경정공원, 경륜장 스피돔, 경륜·경정훈련 외지점, 5개 에콜리안 골프장, 스포츠센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

3) 올림픽공원 내 시설물(KSPO DOME, 핸드볼경기장, 우리금융아트홀 등)에서의 체육경기, 공연 등을 위한 대관
·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도별 대관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건)	346	89	136	202	287
행사인원 (천명)	1,825	176	279	1,188	2,732
수 입 금 (백만 원)	16,286	2,974	4,281	14,059	22,286

4) 주차장(올림픽공원, 미사리경정공원, 일산스포츠센터 등 유료주차면수 7,032대), 올림픽공원 내 매점 6개소, 간이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

그리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물품관리법」 제5조,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조달청고시 제2020-65호)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은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점 4개소, 카페 2개소, 솜사탕 판매소 2개소, 자전거 대여사업 등

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공단 및 체산개발의 「물품관리규정」 제45조에 따르면 물품의 출납 또는 물품의 운영에 관하여 각각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과 체산개발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통해 소관 사업장 내 건축물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경량철골 구조물 등 내구성 물품으로 분류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물품취득원장 등의 장부에 등재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올림픽공원 등 소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축조신고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공단과 체산개발은 총 33개의 가설건축물 중 9개소(올림픽공원 내 순찰로봇 충전소 1개소, 야외흡연실 8개소)에 대해서는 축조신고 후 운영 중이었으나, [표]와 같이 올림픽공원 내 경비 업무를 위한 경비초소 5개소, 공연 등의 행사 시 입장권 배부를 위한 매표소 3개소, 간이매점 등 편의시설 등 총 24개소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 중이었고⁶⁾ 자전거 무인매표소 등 15개소의 가설건축물은 물품취득원장 등에 등재·관리하지 않아 설치일을 알 수 없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6) 가설건축물 1개소([표] 연번 4 경비초소, 남2문 소재)의 경우, 2020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철거 등의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음

[표] 미신고 가설건축물 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주)}	구조	규격(m)	연면적(㎡)	설치목적	설치일	관리주체	물품대장 등재 여부
1	경비초소	평화의문	경량철골	5.5(팔각)×3.5	13.69	경비초소용	1999.11.08.	공단	공단 (1999.11.08.)
2	경비초소	88호수	경량철골	3.8(육각)×3.5	9.43	경비초소용	1999.11.08.	공단	공단 (1999.11.08.)
3	경비초소	한얼다리	경량철골	3.8(육각)×3.5	9.43	경비초소용	1999.11.08.	공단	공단 (1999.11.08.)
4	경비초소	남2문	경량철골	3.0×3.0×2.7	3.96	경비초소용	1999.11.08.	공단	공단 (1999.11.08.)
5	경비초소	몽촌삼거리	경량철골	3.8(육각)×3.5	9.43	경비초소용	1999.11.08.	공단	공단 (1999.11.08.)
6	자전거 무인매표소	평화의광장	경량철골	1.2×1.8	2.16	자전거 이용권 판매	2018.12.21.	공단	미등재
7	자전거 무인매표소	한얼광장	경량철골	1.2×1.8	2.16	자전거 이용권 판매	2018.12.21.	공단	미등재
8	매표소	핸드볼경기장	컨테이너	6.1×3.1×2.75	18.91	공연 입장권 배부	미상	체산개발	미등재
9	매표소	핸드볼경기장	컨테이너	6.1×3.1×2.75	18.91	공연 입장권 배부	미상	체산개발	미등재
10	매표소	올림픽홀	컨테이너	5.2×2.9×2.85	15.08	공연 입장권 배부	미상	체산개발	미등재
11	간이매점	올림픽홀 앞	컨테이너	3.0×2.0	6	간식 제조·판매	2019.06.13.	체산개발	체산개발 (2019.06.13.)
12	간이매점	평화의광장	컨테이너	3.0×2.0	6	간식 제조·판매	2019.06.13.	체산개발	체산개발 (2019.06.13.)
13	간이매점	핸드볼경기장 앞	컨테이너	7.0×4.0	28	간식 제조·판매	2019.06.13.	체산개발	체산개발 (2019.06.13.)
14	간이매점	한얼광장	몽골텐트	5.0×5.0	25	간식 제조·판매	2024.02.01	체산개발	미등재
15	습사탕 판매소	평화의광장	목조	5.2×3.0	15.6	습사탕 제조·판매	1990년 이전	체산개발	미등재
16	습사탕 판매소	핸드볼경기장 앞	몽골텐트	5.0×5.0	25	습사탕 제조·판매	2023.07.01.	체산개발	미등재
17	상품판매소	핸드볼경기장 앞	몽골텐트	5.0×5.0	25	공연관람상품 판매	2022.12.01	체산개발	미등재
18	㉹㉹ 본점	핸드볼경기장 앞	컨테이너	3.0×10×3.3 ×2unit	198	편의점 운영	2021.12.31.	체산개발	체산개발 (2021.12.31.)
19	㉹㉹ 본점	올림픽홀 앞	컨테이너	3.0×2.0	6	편의점 운영	1990년 이전	체산개발	미등재
20	㉹㉹ 본점	한얼광장	컨테이너	3.0×2.0	6	편의점 운영	1990년 이전	체산개발	미등재
21	㉹㉹ 본점	88호수	컨테이너	3.0×2.0	6	편의점 운영	1990년 이전	체산개발	미등재
22	주차초소	백호다리 인근	경량철골	5.5(육각)×3.5	9.43	방호 초소용	1999.11.08.	체산개발	미등재
23	셔틀버스 기사대기실	일산 스포츠센터	컨테이너	3.85×1.95	7.50	기사대기실	미상	체산개발	미등재
24	쓰레기 분리수거장	분당 스포츠센터	샌드위치 패널, 천막	11.7×2.0×2.6	23.4	쓰레기 분리수거	2013.06.21.	체산개발	미등재

주: 연번 1~22번의 경우 올림픽공원(서울 송파구 소재) 내 위치

자료: 체산개발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법적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가설 건축물이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및 천막 등으로 구성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개연성이 있는 등 안전사

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소관 사업장 내 건축물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소관 사업장 내 설치·운영 중인 미신고 가설건축물의 계속 사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 또는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등재된 물품 등의 자산은 물품취득원장 등의 장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소 관 기 관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조 치 기 관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표]와 같이 올림픽 공원에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경륜장 스피돔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및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산개발”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 어린이놀이시설¹⁾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시설번호 ^{주)}	장소(소재지)	설치년도	놀이기구	비고
534618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서울시 송파구)	2006년	삼각조합놀이대 등 7종	실외
35911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서울시 송파구)	2007년	조합놀이대 등 4종	실외
41308	경륜장 스피돔 3층(경기도 광명시)	2009년	조합놀이대, 트램폴린, 볼풀장 등	실내
41309	경륜장 스피돔 3층(경기도 광명시)	2009년	조합놀이대, 트램폴린, 볼풀장 등	실내
529187	경륜장 스피돔(경기도 광명시)	2011년	조합놀이대 등 5종	실외

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시·군·구청 등)에서 설치검사를 위해 부여한 번호
 자료: 공단 및 체산개발 제출자료 재구성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단과 체산개발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총 5개소는 최초 설치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통과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번호를 부여받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놀이시설의 마감·손상·쾌적 상태 등 안전점검²⁾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기관³⁾의 정기시설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⁴⁾이 도시공원, 50인 이상 정원의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 각 호⁵⁾(이하 “장소적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단과 체산개발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⁶⁾로서,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은 연간 700만 명이 내방⁷⁾하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공원 내에 가족 나들이동산,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등이 있고, 소마미술관에서 어린이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이다.

2)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8호)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항목 및 주기”의 안전점검 항목

3) 어린이놀이시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검사기관

4)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5)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르면 목욕영업소, 도로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놀이제공 영업소 등

6) 서울시 송파구청 ㉮팀-824(2015.05.10.)호, ‘질의회신(올림픽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음

7) 출처: 공단 내부 보고서 “2020년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계획(안)”(2020. 4.)

한편 어린이놀이기구시설법상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제2015-2호, 2015. 1. 26.) 제도개선 권고⁸⁾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6. 7. 8.)하여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⁹⁾

따라서 공단과 체산개발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공단과 체산개발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단과 체산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륜장 스피돔의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감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의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8) 공공도서관, 하천구역, 자연휴양림, 캠핑장, 박물관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고,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6. 7. 8.)하여 위 장소를 관리대상으로 확대하였음

9) 행정안전부는 2021. 6. 23.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시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을 관리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등의 장소를 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중임

지정하지 않고,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8호)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의 안전점검 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거나 검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기간 중 올림픽공원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그림]과 같이 결합 부위의 볼트(너트) 노출, 파손, 금속재질의 녹 발생, 성적(性的) 묘사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올림픽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 결과

결합 부위 노출	파손	철 벗겨짐(녹 노출)	성적 묘사 낙서 방치
			

관계기관 의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검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1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조치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p>제 목 : 숙직휴무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p> <p>1. 내 용</p> <p>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¹⁾는 자체 「복무규정」, 「당직근무지침」 및 ⊙본부「당직근무 운영계획」(이하 “당직근무 운영계획”이라 한다)²⁾ 따라 당직근무 제도³⁾를 운영하고 있다.⁴⁾</p> <p>당직근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숙직자는 숙직종료일 오후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직종료일 오후에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기록부 결재 등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숙직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륜·경정 경기 일정상의 이유로 숙직종료일에 숙직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기록부 작성 및 부서장 결재를 사전에 받고 숙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⁵⁾에 날을 정하여 숙직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또한 자체 「인사규정」 제119조 및 제128조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근,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항⁶⁾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비록 위 당직근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직근무자가 숙직종료일 오후에 휴무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숙직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p>					

부내 숙직근무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각지7)에 분포되어 있고, 해당 근무지는 출퇴근 기록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원의 복무 처리 상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단은 복무 관리부서 및 소속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원이 숙직휴무 시 부서장의 승인을 모두 거치도록 하는 복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인사규정」 등의 취지와 숙직근무가 이루어지는 ㉠본부 소관 부서 직원의 복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숙직종료일 오후 숙직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숙직종료일이 아닌 날에 숙직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숙직휴무를 실시하도록 복무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공단 ㉠본부의 ㉡원 및 ㉢원8)의 숙직휴무 복무 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연도별 숙직휴무에 대한 복무 미처리 비율이 9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바, 숙직자가 숙직종료일 오후에 휴무를 실시했는지, 숙직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휴무를 실시했는지 등 복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표] ㉡원 · ㉢원 숙직휴무에 따른 복무 처리 현황(2022년~2024년 3월)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1~3월		
	총계	경륜	경정	총계	경륜	경정	총계	경륜	경정
총 숙직일 ^{주)}	493 (100.0)	247	246	498 (100.0)	248	250	122 (100.0)	61	61
복무 처리 인원 (비율)	47 (9.6)	15	32	85 (17.0)	15	70	13 (10.6)	-	13
복무 미처리 인원 (비율)	446	232	214	413	233	180	109	61	48

	(90.4)		(82.9)		(89.4)	
--	--------	--	--------	--	--------	--

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으로 숙직근무 미실시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숙직휴무에 따른 복무 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주의)

3. 회보여부 : 회보 불필요

- 1) ○본부는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경정 경주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1본부 6실 23팀 9지점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주를 시행하는 본장(광명 경륜본장, 하남 경정본장), 지점 및 사업소에서 경주방송을 수신받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함
- 2) ○본부는 공단 「당직근무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당직근무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3) 경륜본장(광명)의 경우 경륜경주(금·토·일요일 실시)를 위해 입소하는 선수들의 일정에 따라 매주 3일(목·금·토요일) 숙직근무를 운영하며, 경정본장(하남)의 경우 경정경주(수·목요일 실시)를 위해 입소하는 선수들의 일정에 따라 매주 3일(월·화·수요일) 숙직근무를 운영하고 있음. ■원·●원의 경우 선수 후보생 입소 및 훈련 일정에 따라 ■원(영주)은 매주 5일(일~목요일), ●원(영종)은 매주 3일(월~수요일) 숙직근무를 운영 중임
- 4) 공단 본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서울시 노원구 소재)는 채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어 숙직휴무는 발생하지 않음
- 5) 공단 감사실에서 실시한 “2023년 방만경영 및 경영지침준수 특정감사”에서 경륜·경정 선수숙소동 직원들이 숙직휴무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숙직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어 당직근무 운영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2024년 2월), ○본부는 당직근무 운영계획을 변경(2024. 3. 29.)하여 숙직휴무 사용기한을 2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비경주일·오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였음
- 6)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 7) 경륜선수숙소동(경기 광명시 소재), 경정선수숙소동(경기 하남시 소재), ■원(경북 영주시 소재), ●원(인천시 중구 소재) 4개소
- 8) ■원·●원은 경륜·경정선수 및 심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선수 및 심판의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지도교사의 교육 및 양성 등을 임무로 함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2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조치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	---	------	---------------------	------	---------------------

제 목 : 전직 지원교육 관리 부적정

1. 내 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체 「교육훈련 시행지침」 및 매년 수립·시행하는 「퇴직예정직원 전직 지원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예정직원의 경력 재설계를 위해 전직 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직 지원교육 세부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교육대상	잔여 정년 3년 이내인 임금피크제 직원
지원금액	퇴직 전 3년간 총 6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교육	재취업, 창업, 귀농 등
교육관리	이수증(출석증) 제출, 결과 보고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교육 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전직 지원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교육신청서에 대하여 교육기관 세부기준¹⁾ 부합 여부 및 개인별 교육비 잔액²⁾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대상자는 교육 승인이 되면 교육비³⁾를 공단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법인카드 비용을 지급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교육 완료 후 내부시스템으로 이수증(또는 출석증) 제출 및 결과 보고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근태 및 교육 사후관리를 위해 결과 보고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교육 대상자에게 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전직 지원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의 전직 지원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공단은 완료된 교육 267건 모두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수증 제출 촉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전직 지원교육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2] 전직 지원교육 증빙자료 제출 현황(2021년~2024년 4월)

(단위: 건)

구분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현황
합계	305 ^{주)}
교육 완료	267
교육 진행(미완료)	38
이수증 등 제출	0

주: 교육 대상자 105명이 총 305건을 신청함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전직 지원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환류되지 않아 교육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전직 지원교육 취지가 퇴색되었다.

2. 조치할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교육 완료 후 전직 지원교육 대상자로부터 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주의)

3. 회보여부 : 회보 불필요

1) 공단은 고용노동부 「재취업 지원서비스 매뉴얼」을 준용하여 교육기관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2) 교육신청서에 기이수 교육내용(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비용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3) 퇴직 전 3년간 600만 원 한도이나, 교육예산을 고려하여 연 200만 원 내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4) 결과 보고 별도 양식은 없으나, 내부시스템에 교육 내용 및 교육 성과를 각각 200자 이상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음